

한·중 무역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FTA 체결시 정책적 함의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China FTA

이서영(Seo-Young Lee)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겸임교수 (주 저자)

안병민(Byung-Min Ahn)

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한·중 FTA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참고문헌 |
| III. 한·중 무역구조의 특성 | Abstract |
| IV. 한·중 FTA 체결시 정책적 함의 | |

Abstract

The export is an important economic growth strategy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strongly dependant on external trades.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The China is now Korea's first-largest trading partner. Thus,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in South Korea's trade operations is very important. A discussion of Korea-China bilateral FTA commenced in 2004 November.

This paper is to recognize the phenomenon of major issued fields in the Korea-China FTA such as a manufacturing, agriculture, customs and seek a negotiation strategy that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erms of trade based on manufacturing, it is necessary to divide into a private, general reduction and priority reduction item to recognize whether it is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on the specific industry in the FTA negotiation by using an index regarding supplement and competition of these two countries. In particularly sensitive agricultural field, FTA should be progressed gradually after giving a certain period of time of grace period on the basis of various flexible tariff systems in order to minimize agriculture damage as a result of the rapid growth from import of Chinese agricultural goods.

Key Words : FTA, China, Free Trade Agreement, Regionalism

I. 서론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1992년 수교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왔는데, 특히 양국의 교역량은 수교이후 연평균 약 23%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1992년 3.4%에 불과하였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09년 약 22%까지 대폭 상승하였다. 한편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대중국의 무역액은 1,409억 달러에 달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 24%로 2000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상승함과 동시에 미국의 10.4%와 일본의 6.0%의 합보다 월등히 높다. 더욱이 양국간 교역을 반도체, LCD, 휴대폰 등 IT제품이 선도하는 하이테크형 교역구조가 구축되면서 질적인 성장도 크게 진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키(Key)를 잡아야 하며 그 중심에 한·중 FTA 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시장 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공동체 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다른 국가와의 FTA와 차별화 된다.

2010년 현재 중국과의 FTA협상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FTA가 연구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협상준비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004년 9월에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한데 이어 2007년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였다. 2010년 5월에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연구 종료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0년 9월부터 민감분야에 대한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어 내년 중에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한·중 간에 본격적인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양국간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FTA 협상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과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통계를 기초로 수출입 구조와 관세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FTA 추진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울러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거시경제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한·중 무역구조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특히 양국의 관세구조 및 산업별 무역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제IV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한국과 중국 간에 FTA 추진 전략 방향의 제시와 함께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한·중 FTA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거시경제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에는 남영숙 외(2004), 신태용 외(2005), Lee *et al.*(2005), 정인교(2006) 등이 있다.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GDP는 0.14~3.29%, 중국의 GDP는 0.04~1.50%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영숙 외(2004)는 한·중 FTA 연구에 나타난 GDP 증대 효과는 한국은 연평균 0.14~2.30%가 증가하고 중국은 연평균 0.07~0.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GDP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된 것은 중국의 데이터베이스가 1997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중국의 총 교역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대중국 교역비중보다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폭이 확대될수록 GDP 개선 정도가 중국에 비해 클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의 총수출 대비 대한민국 비중보다 높기 때문이며 한국 경제의 규모가 중국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에서는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강조하고 제조업,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에서는 한국이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인교(2006)는 GDP 증대 효과에서는 한국이 연평균 0.55~3.29% 증가하고 중국은 연평균 0.27~1.32% 증가한다고 추산하였다. 양국의 GDP 증대효과가 연구에 따라서 상이한데, 그 이유는 CGE 분석에 사용된 산업 및 국가 분류와 시나리오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된 연구결과는 한·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1〉 GDP 증대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단위: %)

선행연구	한국	중국
남영숙 외(2004)	0.14~2.30	0.07~0.78
신태용 외(2005)	0.18~1.08	0.04~0.18
Lee et al.(2005)	2.44~3.17	0.40~0.59
정인교(2006)	0.55~3.29	0.27~1.32

자료: 각 연구자료에서 정리.

2. 수출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임운상(2002), 남영숙 외(2004), Lee et al.(2005), 정인교(2006)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한·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의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영숙(2004)의 연구에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55억~65억 달러의 대중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대중국 수입은 58억~142억 달러 증가하게 되므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3억~7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는 140억~145억 달러 증가하고, 대중국 수입에서는 142억~145억으로 나타나 2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악화를 추산하였다.

정인교(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은 대중국 수출에서는 323억~327억 달러 증가하고, 대중국 수입에서는 75억~92억 달러로 나타나 무역수지증대효과가 크게 추정되고 있다.

임운상(2002)의 연구는 위의 세 가지 연구에서 GTAP의 CGE 모델로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수입물량함수식 추정을 통해 산출한 가격탄력성과 각국의 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FTA 체결시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시 5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의 무역수지증대효과의 추산결과만으로 살펴보면, 남영숙 외(2004)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52억 2,800만~61억 5,600만 달러,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35억 4,000만~36억 4,8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가 16억 3,300만~25억 9,7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중 FTA의 과세인하에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내 가공무역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2> 수출입 증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단위: 백만 달러)

선행연구	한국의 대중국 수출	한국의 대중국 수입	무역수지
임윤상(2002)	1,740	1,220	520
남영숙 외(2004)	5,488~6,543	5,757~14,192	-269~-7,649
Lee et al.(2005)	13,998~14,501	14,220~14,546	-45~-222
정인교(2006)	32,620~33,319	7,583~9,279	25,037~24,041

자료: 각 연구자료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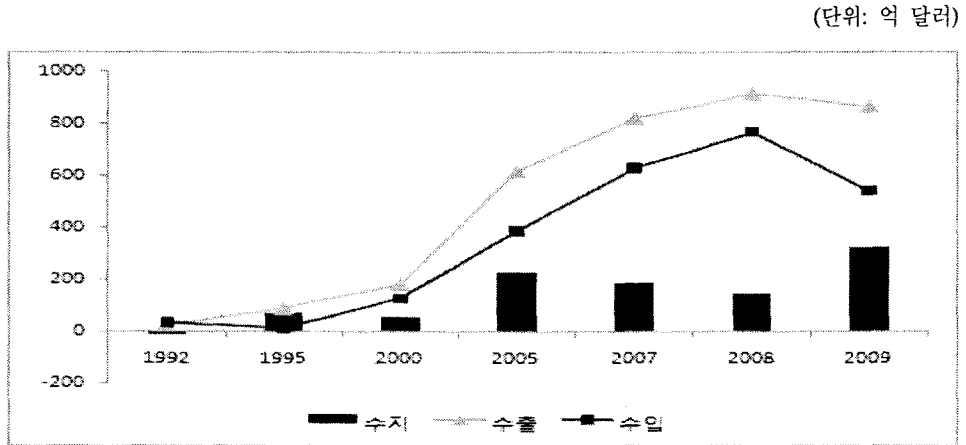
Ⅲ. 한·중 무역구조의 특성

1. 한중 교역 동향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수교이후 2009년까지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2.7%와 17.1%에 달하고 있다. 한국측 입장에 보면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1,409.5억 달러로 수교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3%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1992년 3.4%에 불과하였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09년 약 22%까지 대폭 상승하였다(<그림 3-1> 참조).

200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867억 달러, 수입은 542.5억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은 대중 교역에서 324.5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한편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2년까지 미국이 한국의 제1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한편, 수입의 경우, 2006년까지 일본이 제1위 수입 대상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2007년 이후 중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한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2002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수교 당시인 1992년 중국의 7대 교역상대국에서

2009년에 EU, 미국, 일본에 이어 4번째 교역상대국으로 급성장하였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1] 한중 교역액 추이

양국간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간 교역의 상호보완성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 내 교역이 양국 교역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를 보면, 수교직후 철강이 수출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IT제품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대 IT제품인 LCD, 반도체, 휴대폰의 수출액이 3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1차 상품과 노동집약 제품이 수입을 주도했으나 2009년에는 수출과 같이 IT제품이 주도하고 있다. 2009년 기준 10대 수입품목 중 4개가 IT제품인 반면 민감품목인 의류와 농수산물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농림수산물 수입비중은 1992년 33.1%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5.6%로 하락하여 비중에 큰 변화가 있다(최용민, 2010).

중국의 고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왔다. 지속적인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 측의 불만요인이 되어 왔고 반덤핑조치를 초래하는 등 양국간 통상 마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중국의 커다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 한국 기술의존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완성재 수출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기술과 중간재·자본재를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없이는 중국의 수출주도형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 한중 관세구조

1) 한중 평균관세율

1997년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23%였으나 2001년에는 3,402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 15.3%로 낮추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5,332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3년에는 3,019개 품목에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2003년도 모든 산업의 평균관세율은 WTO협약과 비슷한 11%대를 달성하였다. 중국은 2006년 현재 전 산업의 단순 평균관세율이 9.9%이다.

<표 3-1> 한중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단위: %)

구분	중국			한국		
	단순평균	대 세계 가중평균	대 한국 가중평균	단순평균	대 세계 가중평균	대 중국 가중평균
전체	9.8	4.62	4.54	11.9	6.06	7.29
농산물	14.5	9.35	24.59	41.5	51.06	52.54
광산물	2.9	0.55	2.34	2.8	1.18	2.19
공산품	9.0	4.56	4.49	6.7	4.08	4.62
대상품목수	7,550개 품목(HS 8단위 기준)			11,26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주: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간 실제 교역량을 고려한 관세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한국은 12.8%로서 조금 더 높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WTO 가입계기로 인해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지만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세계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관세율에서도 중국은 4.62%로 한국의 6.06%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산품(HS25-97 기준)의 경우 중국은 9.0%인 반면 한국은 6.7%이며 가중평균 관세율도 중국은 4.56%이지만 한국은 4.08%로 중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HS1-24 기준)의 경우 중국은 단순평균 관세율은 14.5%인 반면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41.5%로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중평균에서도 중국은 9.35%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51.0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중국은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해 7.7%의 관세율인 반면 한국은 5.9%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중평균 관세율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이 3.11%이고,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이 1.68%로서 한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3-2> 참조). 그리고 소비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15%이며 한국은 19.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 추진 시 관세인하에 있어 가공단계별로는 소비재의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비재에 대해 중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대중국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 가공단계별 관세율 비교

(단위: %)

구분	중국			한국		
	단순평균	대세계 가중평균	대한국 가중평균	단순평균	대세계 가중평균	대한국 가중평균
전체	9.7	4.62	4.54	11.9	6.06	7.29
일차상품	8.4	3.45	3.87	26.2	9.78	35.07
중간재	8.0	4.42	4.21	8.5	3.84	4.42
반제품	8.1	6.57	6.87	8.9	4.25	5.17
부품및부분품	7.7	2.37	1.68	5.9	3.03	3.11
최종재	12.3	5.85	5.75	14.3	7.25	7.38
자본재	8.0	4.32	4.62	5.9	3.94	3.18
소비재	15.0	13.18	15.75	19.6	13.06	11.87

주: 양국의 세관 기본코드(한국은 10단위, 중국은 8단위)의 실행세율을 기초로 산술평균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WTO.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를 비교해 보면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 일차상품, 반제품, 소비재 부문에서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품과 자본재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중평균 관세율의 경우 중간재에서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4.21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 4.42%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재의 경우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5.75%로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인 7.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본재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 4.62%로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 3.18%보다 높은 수준이다.

3. 산업별 교역특성

1) 농업부문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입하고 중국은 대체로 수출하는 형태를 띤다. 한국은 이미 농산물 주요 수입국이 되었으며, 농산물 대외교역도 줄곧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적자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교역적자는 1960년대 초반 1억 달러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69억 달러까지 적자폭이 늘어났다.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2005년 농산물 수출액은 225억 달러, 수입액은 116억 달러로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액이 약 109억 달러에 이르는 농산물 최대의 수출국으로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표 3-3>은 한·중간 농축산물 교역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에 3억4천6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축산물 수출은 아주 미미한 실적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입의 경우 26억 달러 규모로 대중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적자규모가 2000년 12억 달러에서 2008년 22억 달러로 적자규모의 폭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117.6	108.7	129.9	166.1	213.7	231.2	259.5	294.6	346.3
수입	1,405	1,111	1,601	2,061	1,499	2,216	2,199	3,100	2,622
무역수지	-1,287	-1,002.3	-1,471.1	-1,894.9	-1,285.3	-1,984.8	-1,939.5	-2,805.4	-2,275.7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입하고 중국은 대체로 수출하는 형태를 띤다. 하지만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FTA 체결이 무차별적으로 제약 없이 체결된다면 많은 품목에서 중국의 수출확대가 일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동북부 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교역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넷째, 중국의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크게 상회하는 규모의 효과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형태로 작동할 일방적 교역구조를 확대할 수 있다(남영숙 외, 2004).

2) 제조업 부문

중국의 WTO 가입 후에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의 변화가 아주 크다. <표 3-4>에 나타난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의 변화를 보면,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에는 철강, 석유 화학 및 섬유 등이 주된 수출 상품이었으나, 그 후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기계류,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로 대중국 수입상품의 고도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02년 한국 자동차업체가 중국 진입을 하면서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계가 대한민국 10대 수출상품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표 3-4>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및 금액

(단위: 억 달러)

구분	1992년	2000년	2009년
1	철강관(4.2)	석유제품(16.8)	LCD(131.7)
2	합성수지(3.0)	합성수지(15.8)	반도체(91.9)
3	철근(2.3)	전자관(12.3)	휴대폰(62.1)
4	가죽(1.4)	철강판(11.0)	합성수지(57.3)
5	인조섬유(1.3)	가죽(7.6)	석유제품(46.6)
6	직물(1.0)	컴퓨터(7.4)	합성원료(30.0)
7	종이(0.9)	기타직물(6.0)	철강관(30.0)
8	섬유기계(0.8)	반도체(5.8)	자동차부품(26.6)
9	석유제품(0.7)	합성원료(5.7)	컴퓨터(24.8)
10	석유화학제품(0.7)	중간원료(5.1)	석유원료(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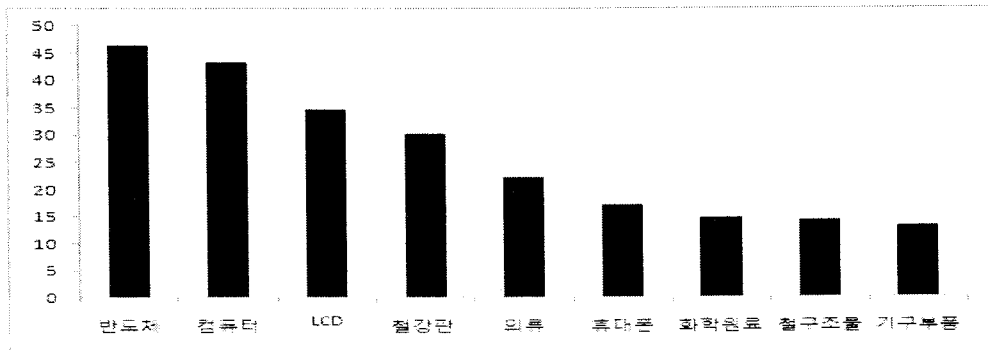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2009년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증가는 기계, 전기전자 제품 및 광학, 의료설비가 수출을 주도하였다. 09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금액이 310.5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공업제품이 133.9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1차 산품과 노동집약 제품이 수입을 주도하였으나 2009년에는 수출과 같이 IT제품이 수입을 주도 하고 있다. 2009년 기준 10대 수입품목 중 4개가 IT제품이며 이들의 수입규모는 141.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가공무역방식에 의한 교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한·중 간 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교역은 양국 간 교역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지대 등 낮은 생산비를 이용하여 해외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 전자부품과 의류, 전선, 피혁제품 등에서 위탁가공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MIT 3단위).

[그림 3-2]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및 금액(2009년)

3) 서비스업 부문

양국 간 서비스 교역규모는 2007년을 기준으로 이미 181.5억 달러를 넘어 상품교역의 12.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교역규모는 1998년 양국의 서비스 교역규모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24.4%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운수 70.2%, 여행업 10.8%이고, 2001년부터는 특허권 등 사용료(8.2%) 및 사업서비스(8.7%) 분야도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한국의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통신업의 경우,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2.5%에서 2007년 0.5%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대중국의 서비스 수입도 운수, 여행, 사업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은 대중국 서비스교역에서 2007년 6억 1천 8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운수,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이장규, 2008).

IV. 한·중 FTA 체결시 정책적 함의

1. 한중 FTA 전략의 함의

한국은 한·중 FTA를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대응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주요한 수단이며,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가장 큰 국가인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위험이 가장 큰 국가로 FTA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과 투자대상지의 확보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동북아 및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최대의 교역 상대국인 만큼 최대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두기 위한 한·중 FTA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경제에 한국경제를 결부시킴으로써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한국은 정치,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FTA가 필요하다. 한·중 FTA로 인해 한국의 동북3성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면 북한과의 교류협력 기회도 넓어지게 되며, 동북아의 평화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도 미일 중심의 태평양 라인만을 고집한다면 신흥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아시아와의 협력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취지의 한·중 FTA는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경제하고 패권구조가 아닌 다자방식에 의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남성룡, 2009).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중 투자의 집중과 중국의 대한 투자 미미 등에 대한 양국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투자구조가

제조업의 단순·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 치중된 것이 하이테크 분야의 다방면의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 체결 후 투자증가로 인한 교역규모가 증가 및 기술, 서비스의 무역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입장에서 한·중 FTA는 동아시아 지역통합 움직임에서 미국, 일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국 중심의 협력 질서를 구축하려는 정치, 외교적 동기가 더 크다고 보여 진다.

한·중 간의 경제적 의존 관계는 FTA 없이도 지리적 인접성이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로 인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 및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세계무역 체제로의 복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FTA 체결을 시장확대와 같은 경제적 의도보다 동아시아 내의 국제협력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외교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남성룡, 2009).

2. 한중 FTA 체결시 정책적 함의

1) 한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세 인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품목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농산물은 16.8%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산업의 경우 중국 관세율 10%(한국 관세율 5.7%)이고, 운송장비는 15.9%, 섬유류는 15.2%, 자동차는 WTO가입 이전(2001년 12월) 100% 관세에서 43.8%, 2006년 26%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기체결한 중·아세안 FTA, 중·칠 FTA, 중·파키스탄 FTA 협정에서 길게는 10~15년의 관세 삭감 유예, 짧게는 5년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이 중국보다 발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중국의 관세장벽이 한·중 FTA 추진의 과제가 될 것이므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중간의 교역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간 FTA를 통해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직접적인 가격인하 효과와 전환효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가격효과는 관세인하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직접 영향을 받는 효과이고, 전환효과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관세인하를 추진할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제품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하는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증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공산품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전략은 첫째, 중국의 명목, 대 한국 가중 평균, 대 한국 실질관세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관세율에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이 7.29%, 중국의 대 한국 가중평균 관세율이 4.54%로 중국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저율의 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한·중 FTA 체결 후 관세인하가 이루어졌음을 가정한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보다는 중국의 대 한국 수출증대 효과가 더 클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경쟁국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대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양평섭, 2007).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가공무역의 관세면제가 면제되는 허용품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공무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더욱 중요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 농업부문에 대한 시장개방과 정책결정

농업부문의 가장 민감한 부문이 될 것이며 또한 양국의 FTA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중 FTA 체결시 한국의 농업은 11.6%~12%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농업 부분의 개방에 있어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및 제조업 부분이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측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담을 안고 있다. 한·일 FTA도 현재 일본의 농산품 시장 개방 문제로 중단하고 있다. 농업 특히 농산품 교역은 한·중 FTA 협상과정 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선 양국간 농업분야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한·중 FTA 타결에 주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다.

농축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농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은 FTA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어느 FTA에서도 농업부문을 완전히 예외로 한 경우는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GATT 24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예외,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칠레와 캐나다의 FTA에서 문화산업은 완전히 제외되었고, 칠레는 자국의 민감품목인 도정용 밀의 관세인하 기간을 17년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 자국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을 위한 세이프가드 및 중간심사조치를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낙농제품은 뉴질랜드의 대중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연간 3억 6000만 뉴질랜드 달러를 수출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일부 낙농제품에 대해 FTA협상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모직물의 경우 중국은 특정국 관세할당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공목제품과 종이제품, 밀, 쌀 등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중국의 민감품목인 축산물과 모직제품에 대해서는 약 3년의 유예기간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협상전략은 한·중FTA 체결을 위한 협상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한국도 한·중 FTA 협상 시 민감분야인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예외, 유예, 이행기간 연장 등 특별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서비스무역의 개방

중국은 FTA 추진에 있어 상품분야 협상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 분야 협상을 나중에 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관세 이외의 분야에서는 개방에 민감한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다(양평섭, 2007). 중국은 특히 WTO 가입 이후 서비스시장 개방을 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이 발전된 홍콩, 마카오를 통하여 CEPA(경제협력강화협정)를 통하여 금융, 통신, 운송, 교육, 의료건강 등의 육성에 힘을 쓰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아세안, 중·칠레의 FTA에 서비스무역을 제외한 상태이다. 호주·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도 서비스분야 포함에 유보적 입장이다. 아직은 중국이 서비스 시장이 발전된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데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김세영 외, 2009). 한·중 FTA에서는 중국이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하여서도 전면 개방할 수 있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즉, 양국 간 FTA 협상을 상품무역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중국내 규제가 많고 투명도가 낮은 서비스·금융·정부조달을 아우르는 포괄적 FTA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서비스업 분야는 교육, 의료 등 양국이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서비스 분야의 협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을 포괄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능 집행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분을 적용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의료 등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원산지규정의 강화

원산지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그 반면 각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에 따라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국 산업발전 전망에 기초한 정책적 고려가 보다 반영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 FTA로 공산품분야의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동차, 및 섬유제품의 대한민국 수출 증가로 국내산업의 부정적인 과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제3국 제품의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 필요하다(김연숙, 2009). 즉, 한·중 FTA 이후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에 따라 국내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민감품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제3국 제품의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양평섭, 2007).

V. 결 론

한국과 중국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FTA는 정치 경제적 효과가 동아시아 역내의 다자간 경제통합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금까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의 FTA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이유는 역내 다자간 FTA 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한·중간 무역 및 경제교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FTA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중 FTA를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대응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주요한 수단이며,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가장 큰 국가인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위험이 큰 국가로, FTA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과 투자대상지의 확보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응 대응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FTA를 통한 정치·외교적 유대관계의 강화로 동

북아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남성룡, 2009).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최대의 교역 상대국인 만큼 최대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두기 위해 한·중 FTA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시장 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공동체 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다른 국가와의 FTA와 차별화 된다 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중국과의 FTA협상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FTA가 연구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협상준비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004년 9월에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한데 이어 2007년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였다. 2010년 5월에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연구 종료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0년 9월부터 민감분야에 대한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어 내년 중에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한·중 간에 본격적인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양국간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FTA 협상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과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제시된 한·중FTA 체결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의 교역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공산품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전략은 중국의 명목, 대한민국 가중 평균, 대한민국 실질관세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경쟁국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대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부문에 대한 시장개방과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의 가장 민감한 부문이 될 것이며 또한 양국의 FTA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농축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농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은 FTA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중 FTA 협상 시 민감분야인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예외, 유예, 이행기간 연장 등 특별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무역의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 양국 간 FTA 협상을 상품무역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중국내 규제가 많고 투명도가 낮은 서비스·금융·정부조달을 아우르는 포괄적 FTA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서비스업 분야는 교육, 의료 등 양국이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서비스 분야의 협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을 포괄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능 집행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분을 적용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의료 등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원산지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중 FTA로 공산품분야의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동차, 및 섬유제품의 대한민국 수출 증가로 국내산업의 부정적인 과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제3국 제품의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양국은 모두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우호협력관계의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감품목에 대해서 양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큰 틀 안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상호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과제를 적극 개발하여 상생의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FTA는 단순히 양국 간의 시장통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기보, “중국의 한·중 자유무역 협정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무역상무학회지』, 제3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김세영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 김연숙,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
- 남성룡, 『한·중 무역발전 및 양국 FTA 연구』, 지식경제부, 2009.
-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과급 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서장문, 『중국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신태용,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5.
- 양평섭,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이인구·조현준,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 실증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2008.
- 이상규 외,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정인교 외, 「2003 한·중·일 FTA 합동연구 총괄보고서」, 2004.
- 정인교,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정책 시사점”, 「한국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 무역학회, 2008.
- _____, “한·중 FTA 경제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12권 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6.
- 정인교 외, 「한중일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정재화, “한·중 FTA 평가와 협상전망”, 「한국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
- 최용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 張岸元,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中國宏觀經濟研究院, 2003.
- 孟佑永, 「地域經濟一體化及東亞細亞自由貿易區的建立」, 中國對外經濟貿易大學, 2003.
- 中國商務部, 「中國外商投資報告 2006」, 중국상무부 사이트, 2006.
- Krumm Kathie and Homi, Kharas, eds, *East Asia Integrates: A Trade Policy Agenda for Shared Growth*(Advanced Edi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3.
- Lee, Hong-sik, et al., *Economic Effect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I)*,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5.
- _____, *Joint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Feasibility of Establishing China-Korea FT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6.
- WTO, *Trade Policy Review -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